

# 정부지원 법적 뒷받침...콘텐츠 구축 등 개관작업 탄력

## 표문화전당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의미와 전망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다. 또 내년 9월로 예정된 문화전당 개관 준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재정지원 확보 = 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함에 따라 문화전당 개관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지원 확보 = 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함에 따라 문화전당 개관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지원 확보 = 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함에 따라 문화전당 개관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시설 임대, 공간관리 용역 등을 발주하지 못했다. 문화전당 콘텐츠(공연, 전시, 운영프로그램) 구축사업의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법 개정안에서 문화전당을 정부 소속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문화전당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정부의 문화기관을 대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개정 법안에 "국가 재정지원을 명시해야 한다"는 여망이 담긴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조항이어서다.

김성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 내년 3월까지 운영조직 출범

## 조직·인력 부처간 협의 난제

## 3개 주체 역할 재정립 필요

은 "개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문화전당 개관을 위한 첫단추가 꺾어진 것 같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문화전당 개관 준비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전당 운영조직 출범 가시화 = 추진단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문화전당을 운영할 전담기구(국립아시아문화전당)를 꾸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23명에 달

하는 인력 선반은 오는 2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이 지난 8월 공개한 '문화전당 운영계획'에 따르면 문화전당은 6개 본부, 4명의 예술감독, 연구소·센터 등 3곳을 두는 조직 체계로 운영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전담운영·민주평화 교류원·아시아문화정보원·아시아예술극장·어린이 문화원 등 6개 본부에 본부장을 두는 체계로 구성되는 안이다.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 원 가운데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은 각각 예술감독이 전시와 공연을 총괄한다.

문화전당의 필수 운영인력은 모두 423명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기획·운영 업무 등을 담당할 일반직(공무원 포함)은

모두 257명, 문화예술 관련 전문직은 모두 166명이다. 추진단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문화전당 운영조직 체계와 인원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문화부에서 조직 구성안을 만들어 인건부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3개 기관 문화전당 운영참여 혼선 =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화전당 운영에 관여하는 3개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현재 문화부 소속 추진단과 특수목적 법인인 아시아문화개발원 외에 전당의 운영주체인 문화전당이 생긴다. 이들 기관의 구체적인 업무영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조직 체계상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개발원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게 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문화전당 조직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업무와 관리영역이 3개 기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와 권한을 놓고 불가피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문화부 조직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들어 문화전당의 정부소속 기구화를 반대해 오기도 했다. 문화전당 업무의 위탁범위도 논란거리다.

광주지역 문화계의 한 인사는 "추진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경우 향후 문화전당 운영기구를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일원에 건립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전당은 지난 10월 말 신축건물 등에 대한 공사를 완료, 오는 2015년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모방 경멸반던 미술사조 '혁신'이 되다



(96) 매너리즘



파르미자니노 작 '성모상'

한 해를 보내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내겐 꼭 필요한 것 같다. 타성이나 관성으로 일해오고, 마음속에서 눈금을 세며 건조하게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익숙해진 일상 자체가 어느덧 나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요즘엔 보통 명사로 쓰이는 '매너리즘'이라는 용어는 미술 분야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전성기 르네상스와 바로크 중간 시기에 일어난 미술양식인 매너리즘은, 르네상스 거장들의 출현 이후 작가들이 진정한 예술정신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기법(manner)만을 모방한 것을 두고 19세기 독일의 미술사학자들이 경멸적으로 일컫는 개념이기도 하다.

당시 미켈란젤로의 후예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나체상을 즐겨 다뤄온 미켈란젤로를 그대로 베껴 성경이야기를 그린 장면에 젊은 운동선수들 같은 우람한 체격의 나체 인물들을 가득 등장시켜 우스꽝스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매너리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파르미자니노(1503~1540)의 '성모상'이 꼽힌다. 성경에 나오는 주제를 늘어진 비례와 꾸며진 포즈로 처리하였다는 평을 받는 이 작품은 화가가 성모를 자기 나름대로 우아하고 고상하게 표현하려고 애쓴 나머지 성모의 목을 마치 백조처럼 길쭉하게 그려 '긴 목의 마돈나'라고도 불린다.

20세기에 이르러 '정신사료서의 미술사'를 연구한 막스 드로르작과 '매너리즘 연구' 등을 저술한 아놀드 하우저에 의해 매너리즘은 르네상스의 쇠퇴가 아닌 새로운 미술 사조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 완벽한 조화와 고전적인 균형의 미를 버린 매너리즘이 변형을 통해 미술의 혁신을 이루었다는 재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곰브리치 역시 저서 '서양미술사'에서 "파르미자니노는 선배 거장들이 이룩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무엇인가 새롭고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것을 창조하고자 모색했던, 아마도 최초의 '현대적인' 미술가였을 것"이라고 주목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매너리즘도 혁신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이러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 6개월 토론·간담회... 장·차관부터 과장까지 만나 압박·호소

## 표문화전당 특별법 통과 이끈 새정치 박혜자 의원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 기관화와 재정지원 강화 규정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을 안(이하 아특별 개정안)이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에는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 갑)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광주시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과 6개월여에 걸쳐 수차례의 토론회, 간담회를 가진 끝에 이러한 내용의 아특별 개정안을 2014년 1월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아특별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물론



론 실·국장, 과장까지 만나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와 함께, 박 의원은 17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지난 16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 소속 기관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며 정부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제 삼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특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자산업 일학습병행제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광·전자산업 일학습병행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학습 병행제란?**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교육기관과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
- 훈련대상 : 신규 채용자 (학력·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능)
- 훈련기간 : 6개월 ~ 4년 (1일 5시간, 연 1,000시간 미만 훈련)

**지원내용**

- 현장훈련(OJT) 및 현장외훈련(Off-JT) 비용은 실비에 준하여 지원

**예시**

- 현장훈련(OJT) : 2,718원(훈련비단가-화학기계) × 3(조정계수) × 80시간(1개월) = 65만4원(1인/월)
- 현장외훈련(Off-JT) : 2,718원(화학기계) × 3 × 1.5(조정계수예시) × 20시간(1개월) = 24만4원(1인/월)

- 근로자 1인당 훈련수당 지원: 월 40만원(1년 480만원)
- 기업내 훈련 담당자 수당 지원: 월 66.7만원(1인, 연간 800만원)
- 기업내 일학습병행제 행정업무 담당자 수당 지원: 월 25만원(1인, 연간 300만원)
- ※ 월 220만원 이상 ⇒ 연 2,640만원 이상 (근로자 1인 기준,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

**참여방법 안내**

- 대상기업 :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신용등급 B 이상
- 모집기간 : 연중상시
- 신청방법 :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전자일학습센터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서 제출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전자일학습센터 T. 062-605-9616로 문의>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한 광전자산업 대표 사업주단체(SC)로 일학습병행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